

박원순 장례 마치고...민주, 후속 대응 고심

고인 명예훼손 안돼...당 선결과 대책 필요
고소인에 대한 도 넘은 공격·비난 멈춰야

민주당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당 정비에 나섰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장례 이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여러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시장님의 유족께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공동장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최소한 장례 기간에는 서로 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가꿔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대다수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죽음을 정쟁화 하는 것을 경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후배 시민운동 활동가로서, 후배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당연한 일이지만 고소인에 대한 도 넘은 공격과 비난은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의 박 시장 아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대응했다.

이날 이형석 최고위원은 "박 시장의 활발한 죽음과 고인의 장례를 놓고 경박하고 경솔한 언행이 나오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상주에게 병역 의혹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

구하고 있다. 상주에게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가짜뉴스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과 유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적극 사죄해야 한다.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에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

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는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유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목소리와 함께 당내 자성의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며 "고인에 대한 과도한 정쟁 및 희화화, 지나친 옹호도 생산적이지 않다. 고인이 남긴 공과 모두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민과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울시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침통한 분위기'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지지도 48.7%...넉달만에 최저

부동산 정책 등 실망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해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리얼미터가 지난 6~10일에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1%포인트 내린 48.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3주차 조사(49.3%) 이후 1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46.5%로 조사돼 역시 3월 3주차(47.9%) 이후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2.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긍정·부정 평

가의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은 3월 3주차 조사 이후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이 전체 지지도 하락에 꾸준히 영향을 끼쳤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통합, 국조 요구

여야가 13일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20분간 21대 국회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협의했다. 양측은 추후 더 협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의견이 있고 조정할 문제가 있어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진전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진전

된 협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자리에서 일부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국조도 한 2개 정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자당 의원만으로 국회원 구성을 진행한 것에 항의해 국회를 보이콧했던 통합당은 이달 초 국회로 복귀하면서 윤미향 및 남북관계 관련 국정조사와 '검인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통합당 내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재명 운명 16일 갈려...허위사실공표 사건 최종 선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13일 밝혔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송갑석 '온라인 통신판매중개 공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오프라인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과다 수수료 및 광고비 지급 요구 등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 판매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5·18 관련자 보상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은 13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5·18 관련 법안은 광주시민의 희생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3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사제했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관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특별법 시행 연장은 저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회 산하위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